어린이사망 '제로' 무엇이든 한다

정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보행도로 없는 곳 시속 20㎞ 이하…과태료도 크게 올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A씨는 그간 학교 앞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뛰어가는 아이를 보며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다. 혹여 아이가 주변에 달리는 차를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드롭존(전용 정차구역)'이 신설되면 A씨 같은 고민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스쿨존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바짝 긴장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일명 '민식이법'을 계기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한다. 스쿨존 내 자동차 속도제한이 시속 30㎞ 이하로 낮아지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차량)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김민식군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스쿨존 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쿨존 내 '드롭존' 도입…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확대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5월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축구클럽)통학버스와 관련해 대책을 내놨다.

먼저 스쿨존 내 도로의 일정지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 도입을 검토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유형, 도로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정차,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예외사항 신설 등 '보호구역 규칙개정'과 함께 승하차구역 설치 근거조항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학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나선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모아 교사와 함께 등하교하며 어린이를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안전 프로그램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더 나아가 통학버스 신고 의무대상도 늘린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6종이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통학버스 신고 의무대상에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 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을 추가해 모두 11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축구클럽 등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 전국 스쿨존 제한속도 30㎞ 이하로…과태료도 대폭 늘려

현재 도로교통법에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어 문제가 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개소 중 제한속도 40㎞ 이상이 588개소(3.5%)였다.

정부는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로변이나 국도와 접해 있어 급격한 감속이 힘든 곳은 등하교 시간대에만 가변형 속도제한을 추진하는 등 시간제 속도하향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완충지대를 마련하고, 스쿨존 중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30㎞에서 2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커진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만원인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12만원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스쿨존 내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안에 모두 폐지한다.

한편 정부는 전국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2022년까지 마치고, 올해 안으로 1500대를 확충한다. 향후 3년 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해서 스쿨존 내 안전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횡단보도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그곳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유도하는 '옐로카펫' 등을 적극 확대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도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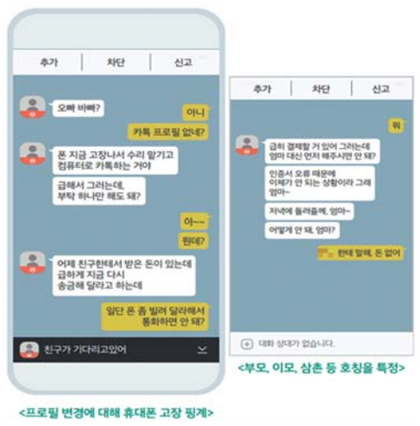
뉴스1

"오빠 바빠? 폰 고장났는데 송금 좀"

설 연휴 인터넷 사기 주의보

"카톡 사칭 문자 조심해야"

31일까지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프로필 변경에 대해 휴대폰 고장 핑계>
<부모, 이모, 삼촌 등 호칭을 특정>

"[00택배] 고객님 택배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주소 수정해 주세요. bit.ly/xxxx"

"오빠 바빠? 폰 지금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카톡하는데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어제 친구한테 받은 돈이 있는데 급하게 지금 다시 송금해달라고 하네?"

"급히 결제할게 있어 그러는데 엄마가 대신 해주시면 안돼? 인증서 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되는 상황이야"

다음은 경찰이 제시한 인터넷 사기 주요 검거 사례들이다. 00택배의 경우 문자에 온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넘어가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나머지 대화는 친구와 부모 등을 사칭한 대표적인 인터넷 사기 건이다.

경찰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기승할 인터넷 사기에 대비해 13일부터 31일까지 사이버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2일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 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13일부터 31일까지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11만2000건에서 지난해 13만6074건으로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설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과 여행상품을 빌미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승차권과 명절선물 등 설 명절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벌어지는 사기, 렌터카와 숙박권 등 여행상품 사기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스미싱과 메신저 피싱, 가짜 쇼핑몰 사이트,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도 빠짐없이 단속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책임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직범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또 사기 목적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심의를 신속히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링크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고 제한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라고도 조언했다. 특히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라고도 했다

경찰은 "거래 전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안전거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부터 간질환 앓는 20~40대

23만명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질병관리본부는 13일부터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20~40대 23만명을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23만명 모두 A형간염의 항체 형성률이 낮은 연령대다.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간질환은 만성바이러스성 간염과 알코올성 간경변증,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버드-키아리 증후군 등 10여종이다.

A형간염 백신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1980년~1999년생은 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한다. 1970년~1979년생은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항체검사 후 면역이 없는 사람에 한해 접종이 이뤄진다.

젊고 간질환을 앓는 사람일수록 A형간염에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 A형간염 치명률(죽은 환자의 비율)은 만성간질환 그룹이 1000명단 46명인 반면 간질환이 없는 그룹은 1000명당 2명에 그쳤다.

지난해 발생한 연령별 A형간염 환자 수는 30대가 6440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6375명(36.1%), 20대 2452명(13.9%), 50대 1607명(9.1%), 기타연령 764명(4.3%) 순이었다. 20~40대가 전체 환자의 86.5%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를 받아 만성간질환을 앓는 20~40대에게 예방접종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